

15.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10월 2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11월 22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

□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10월 8일³⁴⁾인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과 시민들의 인지도가 미흡하므로 대구의 역사와 시민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일 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변경하고,
-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시민정신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4) 직할시 승격일('81. 7. 1.)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82. 6. 18. 지정)

□ 주요내용

- 제명을 「대구광역시시민의날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시민의 날을 10월 8일에서 2월 21일로 변경하고, 대구시민주간을 명문화(안 제2조~제3조)
-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기념 행사 규정(안 제4조)
-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5조~제9조)
-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의 감면을 규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밝히고,
- 안 제2조에서는 10월 8일이었던 시민의 날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 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변경함.
- 안 제3조에서는 대구시민주간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로 명문화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 대구시민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간사 및 서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시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결과

- 1982년 6월 18일 제정된 대구시민의 날은 직할시 승격일('81. 7. 1.)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로 정해져 대구의 역사성과 시민 정체성이 담겨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으며,
- 지난 2018년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71.4%가 시민의 긍지와 애착, 일체감 조성을 위해 시민의 날을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시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수차례 시민의 날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시민의 날을 매년 2월 21로 변경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포럼, 시민토론회, 시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변경하려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 판단됨.

- 또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2017년 지정·선포되어 매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는 대구시민주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되살려 대구 재도약을 위한 신동력으로 삼아야 하겠음.
- ‘대구시민주간 시민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과 예산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시민의 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된 시민의 날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대구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구·군까지 전달이 잘 되지 않음. 시민의 날과 대구 시민주간에 대해 구·군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행사 추진 시 구·군에서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금년 대구시민주간 추진 시 구·군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으나, 내년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구·군과 적극 협의 중임. 구·군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 하도록 하겠음.	
대구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3월 8일이므로, 3월 1일부터 3월 8일 까지를 대구독립주간으로 지정해서 추진 하는 것을 검토 바람.		보건복지국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시민원탁회의를 거쳐 시민 의견 수렴한 결과 2월 25일이 제일 표가 맞는데 3차 전문가포럼을 통해서 2월 21일을 도출한 것은 2월 21일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공론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전반적인 여론도 수렴하고, 전문가분들의 역사적 배경 등 전문적인 식견을 참고하는 절차도 거친 것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